민심과 동떨어진 秋대표 행보 후폭풍 클 듯

秋, 朴과 영수회담 전격 취소

정국 주도권 잡으려 무리수
당 안팎 비난 입지 좁아질 듯
야권 균열 관측 새 변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용현 대표 비서실장, 추 대표, 윤관석 수석대변인, 안규백 사무총장.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의했다가 무산된 영수회담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에서 터져 나오는 강경론을 더는 외면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공세의 수위는 높이되 대화를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 제1야당으로서 안정감을 심어주겠다는 의도에서 추 대표가 회담을 제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영수회담에서 퇴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본격적인 하야 투쟁으로 옮겨가는 명분을 잡을 수 있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14일 오전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박 대통령의 결심을 끌어내보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추 대표의 전격적인 영수회담 제의에는 무엇보다 박 대통령 퇴진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겼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퇴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국중립내각이나 과도정부 등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으로 거국중립내각이나 과도정부가 출범할 경우, 여야의 합의에 의해 총리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조를 이룬다면 민주당이 원치 않은 인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정권창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총리가 개헌 등을 추진할 경우, 민주당의 정권창출 로드맵과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정국 해법을 놓고 여권 인사들과의 물 밑 접촉에 나서고 있는 정황도 전격적인 영수회담 제안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빈손 회담'이 될 경우, 오히려 청와대에 이용만 당하고 민주당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장, 박 대통령과 야권이 생각하는 정국 해법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시국 해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정 정상화를 모색해온 반면 추 대표는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독으로 만났더라도 상징성 외에 큰 소득을 얻기 힘들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야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영수회담 무산에 따른 파장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전망돼 추 대표는 여론의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의도에 말릴 수 있었다는 책임론과 함께 야권 공조에 균열을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추 대표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어수선한 새누리 분당 치닫나

지도부 회의 따로따로…비주류 중진, 당 해체 강력 요구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습책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확산하면서 새누리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의 14일 오전 지도부 회의는 두 곳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정현 대표 등 주류가 주축이 된 최고위원회의는 여의도 당사에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정진석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원내대책회의는 국회에서 각각 열렸다.

이외에도 이 대표의 초선의원 회동 및 재선의원 간담회, 정 원내대표의 3선 의원 오찬 회동, 초선의원 자체 회동, 비주류의 비상시국위원회 회의 등 온종일 공식·비공식 회동이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의 어수선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류 측이 요구한 '당 해체'에 대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이라면서 "당의 해체와 같은 말씀은 자제하고,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조원진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가 어제 당 쇄신 및 단합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1월 21일 전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나경원·정병국 의원 등이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대표의 '로드맵'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비주류인 주호영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지금 새누리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겠느냐"면서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이처럼 당내 갈등이 커지자 당 내외 일각에서는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와 비주류 중진 의원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대권주자까지 힘을 모아 당 해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을 결행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 분당까지는 더 험악한 당내 갈등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친박계는 비박계가 이번 사태를 빌미로 당을 손쉽게 접수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당을 깨겠다면 굳이 해체를 요구할 필요 없이 그들이 당을 나가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된다"면서 "행동은 안 하면서 전당대회에서 지고도 결과를 뒤집으려는 얕은 수"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원순 "민주 영수회담 제안은 오판"

"당 우왕좌왕 행보, 문재인 어정쩡 자세 탓" 쓴소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수회담 제안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시장은 14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단 1초라도 박근혜 대통령 국민이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분명한데 갑자기 영수회담인지 국민이 이해가 안 될 것 같다"며 "영수회담 제안은 청와대에 좋은 일이고 야권분열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영수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사임 요구 외에는 일체 협상이나 조건이 없어야 한다"며 "민심과 따로 가면 야권도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도 지금 하나의 기득권이 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문 전 대표를 겨냥해서도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갈지자 행보를 하냐. 이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어정쩡한 자세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박 시장은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건 당내 최대 세력인 문 전 대표가 입장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좌고우면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대통령·최순실·김기춘·우병우·최경환

"병신년에 국정 농단한 丙申 5적"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 을)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병신(丙申) 5적(五賊)'이라고 지칭하며 단죄를 주장,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의'에서 "1905년 을사년(乙巳年)에 '을사 5적'이 있었다면 병신년에는 국정농단 '병신 5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신 5적의 단죄 없이는 나라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공동 주범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총기획자 김기춘, 검찰과 국정원 등에서 사단급 호위무사를 지휘하고 있는 우병우, 새누리당 의회 세력 두목인 최경환 가운데 지금은 최순실만 수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 강행

야 "국방장관 해임 절차 밟겠다" 강력 반발

한일 양국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안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협정을 이달 내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강력 반발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협정의 군사적 필요성과 관련,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우수한 첩보수집·분석 능력 및 선진화된 원자력·우주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나치게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판국에 국방부가 오늘 GSOMIA에 가서명하겠다는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가서명을 하면 서명에 참여한 한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우 원내대표와 협의해 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대표 간 회동 일정 및 탄핵·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